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교통영향평가' 통과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차 심의 결과 수정 의결... 총 7가지 사항 전제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23만565㎡)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인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도시의 개발사업으로 분류돼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전)이 돼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된 바 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이 수정

의결(조건부 통과)로 심의·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4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자문회의와 자광축이 제출한 교통분석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별도 검증용역을 병행하면서 총 3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총 7차례 진행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총 17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시뮬레이

션 및 검증을 통해 대한방직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했다.

먼저 지난달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유연로 교차로 개선 △홍산로 지하차도 최첨단 선정 △세내로 차도 운영 계획 수립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기타 관련 부서 검토 의견 반영 등에 대해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이어 2차 심의에서는 △유연로 TSM(교통체계관리) 설치 △세내로 언더패스 설치 △마전들로 주출입구 변경 △신호체계 재검토 등에 대해 다시 보완 의결(재심의)됐다.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3차 심의를 통해 △유연로 TSM 및 세내로 언더패스 설계 및 관계부서 협의의 △홍산로 지하차도 상판 경관계획 수립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유지 △수요 관리 방안 추가 검토 △추후 개별 건축물 상세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특히 준공 후 1년간 모니터링 용역 및 개선대책 시행(분기별 위원회에 보고) 등 총 7가지 사항을 전제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김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향후 개별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민들이 교통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일 쉬어야 할 때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1일 최저임금의 60%인 4만7560원 씩 최대 150일간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 가구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참여의료기관)와 사전문답서(참여의료기관), 근로중단확인서(근무처), 매출신고서(자영업자) 등의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으로, 해당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추진 위해 '한자리에'

전주시가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와 복지·돌봄 전문가, 장애인 등 3기 민간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제7차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전주시가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관협의체는 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활동 중인 3기 민관협의체는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말까지 운영되며, 당연직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2026년에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목표와 방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의 시간도 마

련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급여자 △노인 맞춤형 돌봄 중점대상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사회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방문형 의료지원 △퇴원환자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낙상 예방 가정환경 조성 △생활 지원 △이동지원 등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국가 돌봄 사업을 우선 연계한 후 추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9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결성하고 2년 주기로 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7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고도화 버전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시작과 함께 제3기 민·관 협의체가 발족했다.

권근상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주시가 초고령 사회의 돌봄 대안인 통합돌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 운영키로

내달 26일부터 전주월드컵광장

전주시민들의 무더위를 날려 줄 전주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심 속 물놀이장을 전주대학교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두 곳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



농한 전주월드컵광장 1곳으로 통합 운영키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각종 놀이시설물을 대화화·다양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형 폐전자제품 자원 순환체계 구축 토론회

전주시, 폐전자제품 처리현황·사례 학습·시 적용방안 논의

전주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중소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 자원순환정책포럼, 전주시가 함께 도시광산 사업의 주축이 되는 중소형 폐전자제품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첫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회 주제 발표로 △전자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개선과제(이원영 E순환거버넌스 사업본부장) △도시광산화 사례발표-SR센터(이동현 서울도시건축수센터 센터



장)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은실 전주자원순환정책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서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조문성 전주시 청소년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논의를 진행했다.

귀뚜라미그룹, 저소득층 학생 위한 장학금 5000만원 후원

전주지역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대학생 30명 대상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전주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25일 귀뚜라미그룹이 전주지역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귀뚜라미 문화재단을 통해 전주시가 추천하는 저소

득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20명과 대학생 1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규태 전북지사장은 "이번 장학금을 토대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주시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주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30년간 장학금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559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귀뚜라미그룹이 전주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고 나섰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